

공정위 보도자료 일람

(2010. 9. 7. ~ 11. 5.)

일 자	보도자료명	담당부서명
9.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생활전국연합회 및 연합회의 설립기준 구체화 등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상조업체 9월 18일 이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해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9. 8.	『소비자상담센터』 2010년 2/4분기 상담동향 분석결과 발표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휴대폰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9. 9.	LG그룹, 협력회사에 발주정보 사전 예고, 1조980여억원 자금 지원 약속 2008년 11월에 이어 재협약·2차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9. 10.	『인터넷공연예매』 예매 취소시 무조건 취소수수료 10%? 13개 공연예매 사이트 환불규정 시정조치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9. 13.	한·EU, 국제카르텔 조사·M&A 심사에서 상호 공조 제7회 한·EU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	대학(원)생들의 모의 공정위 견연, 공정위 심판정보다 더 치열 제9회 모의공정위 견연대회 대상의 영예는 서울대 경제학부팀이 차지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
9. 14.	전 세계 경쟁정책 전문가들 서울에 모여 제6회 서울국제경쟁포럼 및 제6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위원장회의 개최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9. 15.	가치역(전철) 구내의 매점 운영자에 대한 코레일유통(주)의 과도한 손해배상 부과항은 약관법 위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9. 16.	대우건설, 계룡건설 상생협약 이행평가·총89억원 지원효과 평가대상 2개사 모두 '우수' 등급 획득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9. 17.	공정위, 추석에 하도급대금 24억4천만원 적기 지급 유도 2010년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기업협력국 하도급개선과
9. 20.	게임하이(주)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사전고지 없이 약관 변경하는 것은 무효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9. 24.	『8월의 공정인』은 주류시장 진입장벽 과감히 없앤 '주류산업 규제개선팀' 다양한 맥주·소주 생산업체 등장 가능해져·제2의 '막걸리 열풍' 기대	기획조정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9. 27.	경기 가평군 버스노선 통합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대법 '노선버스 증차 및 노선신설·변경 합의도 담합'	심판관리관실 승무담당관
"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새로운 성장 다짐 정부·업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10. 1.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상조업체 소개 공정위,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명단 발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공정거래 분쟁조정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10. 5.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로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협력국 가맹유등과
"	2010년 9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	2010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주요 업무 현황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10. 6.	허위·과장광고한 (사)한국외국어평가원에 시정명령 6종의 영어시험 모두 국가공인시험·알고 보니 사실과 달라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10. 7.	공정위, 주공 발주 아파트공사에서 대규모 입찰담합 적발 35개 건설사에 총423억원의 과징금 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10. 8.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경쟁정책 노하우 '체험학습' 경쟁당국 직원 2명, 공정위에서 인턴십 실시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10. 11.	2010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개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10. 12.	"아는 것이 힘이다. '카르텔'도 알아야 막을 수 있다!" 기업체 임직원 등 300여명 대상,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10. 13.	공정위, 계열사간 출자규정을 위반한 3개 기업에 대해 경고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10. 14.	공정위, 에어컨 및 TV 가격담합 적발·제재 삼성전자 등 가전 2사에 총191억원의 과징금 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일 자	보도자료명	담당부서명
10. 15.	STX그룹 차원 첫 동반성장 협약 도입 발주정보 사전 예고하고 협력업체 고충처리센터 운영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	불공정 금융투자약관 시정으로 소액 투자자 보호 강화 CMA약관·웹어카운트약관·특정금전신탁약관 시정 요청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10. 18.	대법원,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고법 판결 파기하고 공정위 손들어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과징금 감경 엄격해지고 조사협조 인센티브 커져 최중 부과징금 감경사유 구체화,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비율 확대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10. 19.	공정위, 칠스크랩(고철) 가격 담합 적발 대구·경북지역 25개 기업에 총16억원의 과징금 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	국내 전 산업에 영향 큰 글로벌 대형 M&A 첫 제동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티토, 합작사 설립계획 철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
10. 20.	(주)영풍문고,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의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서면약정 없이 출판사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거나 판매장려금을 수령한 행위,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 등 시정조치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10. 21.	공정위, 상호회원 가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10. 22.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OECD 경쟁위 부의장 자격으로 10월회의 참석 각국 공정위 모여 녹색성장 문제 논의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	공정위, 우리기업 제재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첫 국제카르텔 현지 설명회 우리기업 대부분을 제제한 미국 법무부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와 카르텔 협의도 개최	카르텔조사국 국제카르텔과
10. 24.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대기업 총수 간담회 개최 롯데 등 8개 대기업그룹과 지경부장관·공정위원장·중기청장간 모임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10. 25.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수수료 담합 적발 공정위, 5개 신용평가사업자에 총2억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10. 26.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은 계속 감소 2000년 7조3천억원 규모에서 2010년 1조5천억원 수준으로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10. 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안) 개정 생협의 정관작성 기준 제시·생협의 설립 및 운영에 도움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	잡지, 단행본, 광고물 등 인쇄용 필름 가격담합 적발 7개 필름판매사업자에 총17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10. 29.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승인 국내 승용차 시장 전체 및 SUV 시장의 경쟁 제한할 가능성 없어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	공정위, 중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 카르텔·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 주제로 진행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
"	5개 흡소필수사업자의 납품구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이제는 납품 후 상품이 멸실·훼손되더라도 납품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11. 1.	인터넷쇼핑·5만원 이상 구매대금도 안전 보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팀
"	물탱크, 소형선박, 육조 등 제품 원료인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담합 제재 8개 업체에 총 과징금 20억7700만원 부과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	2010년 10월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	다단계판매업자 또 줄었다·3/4분기 74개, 2분기 연속 감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11. 2.	(주)파리크라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제공기한 미준수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	내부거래공시제도 관련 질문답변 사례, 게시판에서 확인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FAQ를 홈페이지 통해 각 기업집단에 제공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11. 3.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위반 '동부' 기업집단에 과태료 부과 총 1억9535만원·점결과, 법 위반건수 줄었으나 지속 감시 필요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11. 4.	유통분야(대형마트 5개사) 상생협약 이행평가·총5173억원 지원효과 이마트 '우수' 등급,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양호' 등급 획득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
"	대기업이 1차 협력사 통해 2차 협력사 지원 정당 「공정화지침 및 협약 절차·지원기준」 개정	기업협력국 하도급총괄과